

“피해는 다우리가” 애타는 환자들

빅5병원 북새통...의료진 피로감 역력 “강대강 대치로 환자·가족들만 피해” 수술 밀린 환자는 “정부와 타협하길”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시한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들의 복귀는 요원한 모습이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10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조속한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 해소를 촉구했다.

28일 뉴시스가 찾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은 만석 이었고, 환자 가족들은 자리가 없어 서 있는 경우도 파다했다. 접수처에선 진료 순번표가 빠르게 늘어나고, 대기 인원들의 눈길은 순번표와 대기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남아 있는 의료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함에도 급하게 병원 곳곳을 뛰어다녔다.

유전병을 앓는 5살 딸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찾은 최용재(44)씨는 “딸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아이 2명도 다 어려서 아프거나 다칠 경우 빠르게 조치가 안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정부와 의사의) ‘강 대 강’ 대치로 우리 같은 환자 가족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진료가 바로 진행이 안 되니 불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지 않나. 그런데 너무 자기네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이들은 의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 박탈 등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항암 치료를 받는 60대 어머니와 함께 서울대병원에 온 30대 여성 정모씨는 “저희 어머니처럼 연로하신 분들은 바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데 현 상황에선 그게 어렵다”며 “아픈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의 어머니도 “항암 치료나 진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의사가 부족해서 힘들다면 서 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나. 자기 부모가 아파 죽겠다고 하면 반대하고 있을 거냐”고 반문했다.

경북 김천에서 온 최병원(63)씨 역시 “여태까지 의사 파업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의사들이 이길 거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는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 오래 끌면 끝수록 환자만 손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40대 직장인 이모씨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다음 달 초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돼 병원에 수술 일정을 문의했는데 알 수 없다는 답변 받았고, 어제는 진료 예약 취소 알림톡을 받았다”며

“직장 생활하면서 수술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어렵게 잡은 만큼 수술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시민들 역시 이번 집단행동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어린 딸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찾은 김지수(42)씨는 “지방 의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작정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란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의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환자들 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타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까지 단 하루가 남았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레지던트는 뉴시스에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개인의 소명감에만 맡기기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한다는 전임의(펠로우)도 “교수들과 전문의·전임의(펠로우)가 함께 당직을 서고 있고, 저도 평소보다 당직을 자주 선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 어제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여전히 교수진과 전문의·전임의, 그리고 PA(진료보조) 간호사만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80.8%에 해당하는 9937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환구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희면기자



담양소방, 찾아가는 아파트 피난 홍보관 운영

담양소방서는 겨울철 자체 특수시책 일환으로 관내 아파트 9개소에서 “찾아가는 아파트 피난 홍보관”을 운영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신설 비상소화장치 시연회 개최

진도소방서는 지난 27일 관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및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2개소(송근마을, 활곡마을)를 신설하여 화재대응 시연회를 열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소방, ‘내가 소방관이 된다면?’...소방 MBTI 개발

강진소방서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소방관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MBTI로 알아보는 네 소방관 타입’을 운영하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경찰, 실종문자보고신속제보한 민간인에 감사장

무안경찰서는 지난 27일 신속한 제보로 실종된 장애 아동(15세, 남)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운 김OO(67세, 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남도파출소, 교통사고 예방활동 홍보 나서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경찰 활동을 홍보하는 주민소통형 경찰 활동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경찰, 노인학대 예방 업무협약 체결

보성경찰서는 최근 관내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보건단체 “정부·의료계 대치 말고 공공의료부터 강화를”

“정부 방안도 한국 의료 모순 방치 위험”
공공병원 확충 및 인력양성 정책이 방안

의과대학(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노년·노동자 및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인력 인력 증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론과 수가 인상론, 정부의 시장 방위적 양적 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위적 의사 증원 정책

은 과잉진단·과잉의료의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해지지만, 정작 필수·지역의료 분야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 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공공의대 신설,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 등 공공보건인력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운동본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총선 정책 과제로 ▲5년 내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 ▲공공병원 위탁 운영 금지 폐지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폐지 ▲공공의료 컨트론텐터인 국가 공공의료관리위원회(가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오유나기자

동부건설 영업 취소도 집행정지...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동부건설, 처분 불복 소송·집행정지 신청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 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과실청인(국토부)이 지난 1월 신청인(동부건설)에게 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분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GS건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

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 건설사가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로 다른 건설사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변용일기자